

인도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3. 2.

I. 일반개황	1
II. 경제동향	2
III. 정치·사회동향	7
IV. 국제신인도	10
V. 종합 의견	12

I. 일반개황

면적	3,287천km ²	GDP	18,779억 달러 (2012년)
인구	1,220백만 명 (2011년)	1인당 GDP	1,539달러 (2012년)
정치체제	연방공화제	통화단위	Rupee
대외정책	비동맹 중립	환율(달러당)	53.32 (2012년 평균)

- 인도는 서남아시아에 위치하여 동쪽으로 방글라데시, 미얀마 및 벵골만, 서쪽으로 파키스탄과 아라비아해, 북쪽으로 중국, 네팔 및 부탄, 남쪽으로 인도양과 접하고 있음.
- 인구는 12억명에 달하며, 인구의 80% 이상이 힌두교도임.
- 1947년 8월 15일 영국으로부터 독립하였으며, 자립지향적 수입대체형 경제체제를 유지해왔으나, 1991년부터 자유화정책을 채택, 경제개혁 및 대외개방을 추진해오고 있음.

II. 경제동향

1. 국내경제

- 경기부양 추진에 따른 경제성장 회복 전망
 - 정부의 경기부양정책에 따른 민간 소비 증가로 2009년 8.2%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2010년 경제성장률은 농업 생산 증가와 산업 생산 및 서비스분야의 호조 지속으로 9.6%를 기록하였음. 물가 상승에 따른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2011년 하반기부터 성장이 둔화되어 경제성장률이 6.9%에 그쳤음.
 - 물가 상승 지속, 성장세 둔화에 따른 소비 및 투자 심리 악화, 유럽 위기로 인한 수출 둔화 등으로 2012년 경제성장률은 5.4%를 시현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2013년에는 경제 개혁 및 경기부양 정책 추진 등에 힘입어 6%대의 경제성장률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됨.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e
경제성장률	3.9	8.2	9.6	6.9	5.4
재정수지 / GDP	-6.0	-6.4	-4.8	-5.9	-6.1
소비자물가상승률	8.4	10.9	12.0	8.9	9.2

자료: IMF, EIU.

□ 소비재가격 안정에 따른 소비자물가상승률 둔화 전망

- 2009년 자연 재해로 인한 국내 농업 생산 감소 및 세계 경기 회복에 따른 국제 상품가격 상승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10.9%를 기록하였고, 2010년에도 수입물가 상승과 정부의 통화완화정책으로 인한 저금리 기조 및 해외자본 유입 확대가 제조업 물가상승으로 이어지며 소비자물가상승률이 12.0%를 기록하였음.
- 물가 불안이 가중되자 인도중앙은행(Reserve Bank of India: RBI)은 기준금리(Repo rate)를 2010년 3월 4.75%에서 2011년 10월까지 8.5%까지 점진적으로 인상함에 따라 2011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8.9%로 다시 하락하였음.
- 2012년에는 루피화 약세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 식료품 및 유가 인상 등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9.2%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되나, 2013년에는 경기부양 정책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인 소비재 가격 안정세 등에 힘입어 소비자물가상승률은 8%대로 다소 낮아질 전망.

□ 만성적인 재정수지 적자 지속

- 비효율적인 조세제도 및 낮은 소득세 징수율로 인한 세수 부족, 선심성 정책에 따른 정부지출 증가 등으로 인하여 인도 정부의 재정수지는 만성적인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
- 2009년에는 총선에 따른 선심성 정부지출 증가, 물품세 및 관세 수입 감소 등으로 재정적자가 GDP의 6.4%를 기록하였으나, 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 등으로 2010년 재정적자는 GDP의 4.8%로 축소되었음. 그러나 물가상승에 따른 연료, 비료 및 식료품 보조금 부담 증가로 2011년 및 2012년도에는 각각 5.9% 및 6.1%를 기록한 것으로 보임.

- 2011년 및 2012년 지방정부를 포함한 인도의 재정수지는 각각 GDP 대비 8.5% 및 8.4% 수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최근 정부는 유류 및 식료품 보조금 축소, 공기업 지분 및 2세대 이동통신 주파수 매각 등을 통한 재정적자 축소 방안을 발표했으나, 투자 심리 위축으로 인한 매각 가치 하락, 2014년 총선을 앞둔 경기부양 정책 추진에 따른 재정지출 확대로 재정적자 규모는 GDP 대비 5%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2. 경제 구조 및 정책

가. 구조적 취약성

□ 열악한 인프라로 인한 경제성장 제약

- 전력, 도로, 항만, 통신 등 열악한 인프라가 매년 인도의 경제성장률을 1~2%포인트 하락시키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등 인도의 경제성장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 열악한 교통상황으로 인한 식료품 배송 지연이 식료품 가격 상승의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으며, 2012년 전력부족율은 평상시 기준 9.3%, 피크 시에는 10.6%를 기록하고 있고 2012년 7월말 대규모 정전사태가 발생하는 등 전력 인프라 부족도 심각한 수준임.
- 인도정부는 12차 경제개발계획 기간(2012~2017년) 중 인프라 개발에 약 1조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나, 과도한 정부 부채로 인해 인프라 펀드 조성 등 인프라 개선을 위한 외국인투자 및 민간자본조달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 중임.

□ 만연된 관료주의와 부정부패

- 인도는 심각한 관료주의와 복잡한 행정업무로 행정 효율성이 낮으며, 특히 지방정부의 힘이 커서 중앙 정부에서 승인한 사항이라도 지방 정부의 반대로 사업진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사업개시에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사업 개시 후에도 세무, 노동문제 발생시 해결이 어려운 상황임.

- 세계은행이 2012년 10월에 발표한 Doing Business에 따르면 인도의 기업경영여건 중 사업개시 부문은 조사대상 185개국 중 173위, 건설허가 부문은 182위, 계약집행 부문은 184위를 기록함.
- 2008년 2세대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 입찰 및 2005~2009년 석탄 매장지 매각 과정에서 특혜 제공으로 인해 각각 390억 달러 및 330억 달러 상당의 국고 손실을 입힌 부정부패 스캔들이 있었음.
- 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부패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에 따르면, 인도는 36점을 득점하여 콜롬비아, 그리스, 몽골, 세네갈 등과 함께 조사대상 176개국 중 94위에 해당됨.

나. 성장 잠재력

□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내수시장

- 최근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중산층 인구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제 성장세가 지속될 경우 중산층 인구는 2010년 1억 6000만명에서 2015년 2억 6700만명, 2025년에는 5억 4,700만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거대한 내수시장이 형성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2012년 현재 15세~64세 경제활동인구 비중이 65.2%로 높으며, 14세 이하 인구 비중은 29.3%에 달하는 반면,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5.6%에 불과함. 인구구조상 향후 지속적인 경제활동인구 증가가 예상되어 풍부한 노동력 공급에 따른 경제성장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음.

□ 다변화된 산업 구조와 높은 저축률 및 투자율

- 2011년 인도의 산업별 비중은 농업 17.2%, 제조업 26.4%, 서비스업 56.4%를 보이고 있는 등 서비스산업 중심으로 다변화된 산업구조를 보이고 있음.
- 특히, 영어 구사능력과 숙련된 기술을 겸비한 풍부한 저임 노동력과 정부의 적극적인 IT산업 지원정책에 힘입어 IT산업이 세계적인 수준이며, IT 기술을 바탕으로 미국 및 유럽과의 시차를 이용하여 컴퓨터 프로그래밍, 콜센터 등 글로벌 아웃소싱이 증가하고 있음.

- 한편, 2011년 인도의 저축률 및 투자율은 각각 GDP의 31.6% 및 35.0%를 기록하여 인도 경제의 성장세를 뒷받침하고 있음.

다. 정책성과

□ 재정수지 적자 완화 및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추진

- 2012년 7월 취임한 치담바람 재무장관은 2012년 재정수지 적자를 GDP의 5.3% 수준으로 관리하고 향후 점진적으로 재정수지 적자폭을 축소하여 2017년에는 GDP의 3%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계획을 발표함.
 - 유류 및 식료품 보조금 축소, Oli India Ltd. 등 주요 공기업 지분 및 이동통신 주파수 매각, 공기업의 배당 확대 등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조치를 연이어 추진하고 있으며, 2012년도 재정수지 적자 목표치의 조정 의사가 없음을 지속적으로 천명하고 있음.
- 2012년 9월, 인도 정부는 단일브랜드 및 멀티브랜드 소매 유통업, 항공업, 전력 거래 및 방송 서비스에 대한 외국인 지분을 확대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2013/14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소급과세제도 도입 연기를 명시하는 등 경제성장세 둔화, 부정부패, 조세 및 사업권 관련 불확실성 증가 등으로 악화된 외국인 투자 심리 개선을 꾀하고 있음.
 - 특히, 슈퍼마켓이나 할인점과 같은 멀티브랜드 소매 유통업 부문 개방은 2011년에도 추진되었다가 연정 내 일부 세력 및 야당의 거센 반발로 인해 철회된 바 있으나, 2012년에는 이러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상하원 모두의 동의를 확보하는데 성공했음.

3. 대외거래

□ 루피화 약세로 인한 경상수지 적자폭 축소 전망

- 서비스수지의 지속적인 흑자 시현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 및 점진적 무역 자유화 등에 따른 수입 수요 증대, 원유 및 금 가격 상승 등에 따른 상품수지 적자 증가로 경상수지 적자폭 역시 2009년 이후 확대 추세를 보이고 있음.

- 2012년에는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상품수출 감소로 인해 상품수지와 경상수지 적자 규모는 각각 1,967억 달러 및 865억 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추정됨.
- 루피화 약세에 따른 서비스 수출 증가 및 금 수입 관세 인상 등 정부의 상품수지 개선 정책 등에 힘입어 2013년 인도의 상품수지와 경상수지 적자폭은 2012년 대비 다소 축소될 전망이다.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f
경 상 수 지	-30,972	-26,186	-52,275	-60,038	-86,475
경상수지 / GDP	-2.4	-2.0	-3.1	-3.2	-4.6
상 품 수 지	-92,675	-79,950	-96,239	-116,413	-196,748
수 출	199,065	167,958	225,915	299,387	297,058
수 입	291,740	247,908	322,154	415,800	493,806
외 환 보 유 액	246,603	258,583	267,814	262,933	281,480
총 외 채 잔 액	225,994	249,993	290,282	287,469	297,597
총외채잔액/GDP	17.5	18.7	17.3	15.2	15.9
D S R	9.7	6.0	6.8	6.5	7.0

자료: IMF, World Bank, EIU.

□ 정부의 개혁·개방 정책이 안착할 경우 외국인 투자 증가 가능

- 대(對) 인도 외국인직접투자는 금융을 포함한 서비스산업,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통신 등 ICT산업 위주로 이루어져 왔으나, 열악한 인프라, 만연한 부정부패, 토지 수용 및 환경 규제 등과 관련된 복잡한 행정 절차, 지방정부의 반대로 인한 투자 지연 등이 외국인직접투자의 제약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 대 인도 외국인직접투자는 2008년 434억 달러를 기록한 이후, 2009년 356억 달러, 2010년 265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감소 추세를 보였음. 석유 및 철강 산업에 대한 대형 사업 추진으로 2011년 342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나, 인도 경제성장세 둔화, 고물가, 정부 재정적자 증가 등 거시지표 불안, 2012년 초에 시행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금 소급 과세 시도 및 면허 취소 등에 따른 투자 심리 악화로 2012년 234억 달러로 급감한 것으로 추정됨.

- 2012년 2월 인도 정부는 노르웨이 Telenor, 러시아 Sistema, 일본 NTT 등 외국사업자가 2008년 취득한 통신면허 122건을 취소하였으며, 동년 3월 인도 기업을 인수한 외국기업에 대하여 과거 비과세 자본거래에 대한 자본이득세의 소급과세를 위한 세법 개정을 발표함.
- 유류 및 식료품 보조금 축소, 공기업 지분 매각, 소매 유통업, 항공업 등에 대한 외국인 지분을 확대 등 2012년 하반기 정부가 발표한 재정 개혁 및 외국인투자 유치 정책이 안착할 경우 2013년도 인도 외국인 직접투자는 320억 달러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2013년 중 대외채무 관련 지표 개선 가능

- 2012년말 기준 총외채잔액은 2,976억 달러로 GDP 대비 대외채무 비중은 15.9%, 외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7.0%에 달한 것으로 추정되어, 2011년 대비 다소 악화되었음.
- 정부의 경기부양정책 및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정책이 성공을 거둘 경우 대외채무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2013년 GDP 대비 대외채무 비중이 14% 수준으로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III. 정치 · 사회동향

1. 정치안정

□ UPA 연정의 하원 과반 의석 붕괴

- 2009년 실시된 제15대 총선에서 만모한 싱 총리, 소냐 간디 등이 속한 국민의회당 중심의 통일진보연합(UPA)이 압승을 거둠으로써 재집권에 성공하였으나, 경기 침체 및 연이은 부정부패 스캔들로 최근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 한편, 2012년 9월 발표된 경제 개혁안에 대한 반발로 트리나몰의회당 (TMC)이 UPA에서 탈퇴함에 따라 UPA는 하원 과반수를 상실하게 되었음. UPA에 우호적인 군소 정당이 존재하고 있으며 야권 분열로 싱 총리에 대한 불신임투표 추진이 어려워 2014년 총선까지 UPA 정권이 유지될 것으로 보이나, 현 정부의 정책 추진력 약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

2. 사회안정 및 소요/사태

□ 다민족에도 불구하고 다양성을 포용하는 문화로 사회불안 미미

- 다양한 종교, 민족, 언어 등이 공존하고 있으며, 지역간 경제발전 수준 및 소득 격차가 크고, 최근 급속한 경제 성장에 따라 계층간 빈부격차 또한 심화되는 등 사회 구조가 복잡함.
- 일반화 되어 있는 자유민주주의 의식, 인내와 관용의 국민성이 인도의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 구조를 포용하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음.
- 한편, 카스트제도는 공식적으로 이미 철폐되었으며 동 제도의 폐해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부 정책이 시행되고 있음. 그러나 종교와 함께 많은 인도인들이 동 제도를 여전히 숙명적으로 수용하고 있어 인도 사회의 안정을 유지하는 데 카스트제도가 역할을 하고 있음.

□ 공산반군에 의한 빈번한 폭력사태 발생

- 인도 중동부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는 낙살라이트(Naxalite)로 불리는 인도 마오주의 공산반군들의 폭력사태가 자주 발생함.
- 인도 정부가 진압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나, 마오주의 공산반군들이 빈곤 지역 위주로 활동하면서 인도 하층민들의 지지를 얻고 있어 정부의 반군 세력 근절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음.

3. 국제관계

□ 실용주의적 대외관계 노선 추구

- 인도는 모든 국가와 균형을 유지하며 긴밀한 관계를 추구하여 급속한 경제 성장 및 높은 성장 잠재력에 대한 국제 사회의 관심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자국의 실리를 확보하고자 하는 실용주의적 대외관계 노선을 추구하고 있음.
-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위한 일본-독일-브라질과의 공동 협력, 남아시아지역협력체(SAARC) 주도, 주요 강대국 및 신흥개도국과의 협력체 등 다양한 협력기구 참여 등을 통해 자국의 국제적인 위상 강화에 노력하고 있음.

□ 국경분쟁 등에도 불구하고, 파키스탄과의 관계 개선 노력 지속

- 1947년 파키스탄이 종교 문제 등으로 인도로부터 분리 독립한 이래 양국은 카슈미르 지역 영유권 및 테러 등으로 인한 잦은 분쟁을 겪어 왔음.
- 카슈미르 영유권 분쟁으로 세 차례 전쟁을 치른 후 현재 휴전 상태에 있으나 총격전이 간헐적으로 벌어지고 있으며, 2013년 1월에는 양국간 충돌로 사상자도 발생하였음. 한편, 2006년과 2008년 뭄바이에서 발생한 테러 사건 역시 양국 관계를 급랭시킨 바 있음.
- 다만, 최근 인도의 파키스탄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제한 철폐, 상대 국민에 대한 비자 요건 완화, 파키스탄의 인도에 대한 최혜국대우(MFT) 부여 등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도 지속 추진되고 있음.

□ 중국과 정치적 긴장관계 및 경제적 실리 추구 병행 지속

- 인도는 중국과 서북부 잠무-카슈미르와 동북부 아루나찰프라데시 등 약 125,000km²의에 달하는 지역의 영유권에 대한 분쟁이 미해결 상태로 남아있음.
- 2012년 12월 국경선 확정을 위한 제16차 고위급 회담이 개최되었으나, 양국의 견해차가 커 국경 확정은 난항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 중국이 전자여권에 분쟁지역을 자국 영토로 표기하여 인도가 반발하는 등 간헐적으로 영토 문제로 인한 갈등이 표출되고 있음.
- 그러나 2015년까지 양국간 교역액 1,000억 달러 달성 목표를 설정하는 등, 양국 간 교역량 확대에 따라 경제 협력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정치적 긴장관계 속에서 실리적인 측면에서는 경제 협력 관계를 병행하는 양상을 보임.

IV. 국제신인도

1. 외채상환태도

양호한 외채상환태도 유지

- 인도는 대외채무를 재조정할 바가 없고 총외채잔액은 GDP 대비 20% 이내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으며, 2012년말 기준 외환보유액 규모가 2,815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단기적으로 대외지급능력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됨.

2. 국제시장평가

주요 신용평가기관 모두 투자적격등급 유지

- S&P, Moody's, Fitch 등 주요 국제 신용평가기관 모두 인도에 대해 투자적격등급을 부여하고 있음.
- Moody's는 2004년 1월에 인도의 외화표시 장기채권 등급을 Baa3로 상향조정하였고, Fitch와 S&P도 각각 2006년 8월과 2007년 1월에 BBB-로 상향 조정 후 등급에는 변동이 없는 상태임.
- 다만, Fitch와 S&P는 2012년 상반기 중 경제성장세 둔화 및 정부의 재정적자 확대 등을 이유로 신용등급 전망을 Stable에서 Negative로 조정하였음.

<표 3>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수출입은행	B2	(2013. 2.)	B2	(2012. 7.)
OECD	3등급	(2012. 3.)	3등급	(2011. 3.)
S&P	BBB-	(2012. 4.)	BB+	(2010. 3.)
Moody's	Baa3	(2011. 8.)	Baa3	(2010. 7.)
Fitch	BBB-	(2012. 6.)	BBB-	(2010. 6.)

□ 주요 ECA의 지원태도

- 미국수은 : 전액인수가능
- 영국ECGD : 전액인수가능
- Euler Hermes : 단기전액인수가능
- 네덜란드 Atradius : 전액인수가능

3.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수립 : 1973년 12월10일 (북한과는 1973년 12월 10일)

□ 주요협정 : 무역경제기술협력협정(1974년), 과학기술협력협정(1976년, 2006년 개정), 이중과세방지협약(1986년), 투자보장협정(1996년), 세관협력협정(2006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2009년 체결, 2010년 1월 발효)

□ 교역규모 및 해외직접투자 현황

- 2012년 기준 인도는 우리나라의 제9위 수출 대상국이며, 인도와의 교역 규모는 양국의 경기회복 및 2010년 포괄적경제동반자 협정 발효 등에 힘입어 2009년 122억 달러에서 2010년 171억 달러, 2011년 205억 달러로 크게 증가하였으나, 2012년 교역규모는 글로벌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소폭 감소한 188억 달러에 그침.

<표 4> 한·인도 교역 규모

단위: 천 달러

	2010	2011	2012	주요품목
수 출	11,434,596	12,654,078	11,921,074	자동차부품, 합성수지, 윤활유, 냉연강판
수 입	5,674,456	7,893,573	6,923,868	나프타, 합금철, 알루미늄
합 계	17,109,052	20,547,651	18,844,942	

자료: 한국무역협회.

- 우리나라의 대 인도 해외직접투자는 2012년 9월말 현재 제조업을 중심으로 593건(신규법인 수 기준), 36억 9,646만 달러를 기록하고 있음.

V. 종합 의견

- 물가 상승 지속, 성장세 둔화에 따른 소비 및 투자 심리 악화, 유럽 위기로 인한 수출 둔화 등으로 2012년 경제성장률은 5.4%를 시현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2013년에는 경제 개혁 및 경기부양 정책 추진 등에 힘입어 6%대의 경제성장률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됨.
- 수입물가 상승, 식료품 및 유가 인상 등으로 2012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9.2%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되나, 2013년에는 국제적인 소비재 가격 안정세에 힘입어 8%대로 다시 낮아질 전망이다. 2012년 재정적자는 GDP의 6.1%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되며, 2014년 총선을 앞둔 경기부양 정책 추진 등으로 2013년에도 GDP의 5%대의 재정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상품수출 감소로 2012년 상품수지 및 경상수지 적자는 각각 1,967억 달러 및 865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되나, 루피화 약세로 인한 서비스 수출 증가 및 금 수입 관세 인상 등 정부의 상품수지 개선 정책으로 2013년 상품수지 및 경상수지는 2012년 대비 다소 축소될 것으로 전망됨.
- 재정적자 축소 및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경제개혁안 추진에 반발하여 연정 내 일부 세력이 탈퇴함에 따라 연정의 하원 과반 의석이 붕괴되었음. 야권 분열 등으로 현 정권이 2014년 총선까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나 현 정부의 정책 추진력 약화는 불가피해 보임.
- 대외채무를 재조정할 바 없으며, 총외채잔액은 GDP 대비 20% 수준 이내에서 관리되고 있고 2012년말 기준 외환보유액 규모는 2,815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단기적으로 대외지급능력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됨.

책임조사역 임영석 (☎02-3779-5704)

E-mail: yslim@koreaexim.go.kr